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성명	수험 번호
----	-------

1. 국민 주권의 실현 방식 A, B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중 하나임.)

- A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사람들이 국가를 통치할 사람을 거부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정치 체제이다.
- B는 인민이 대표자를 갖는 순간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 권력으로서의 주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는 신념에 기초한 정치 체제이다.

- ① A는 B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 ② A는 B보다 중우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 ③ A는 B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④ B는 A보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⑤ B는 A보다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실현이 용이하다.

2. (가)~(라)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습 주제 : 근대 시민 혁명과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1.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
  - 영국: (가)    ○ 미국: (나)    ○ 프랑스: (다)
2. 근대 시민 혁명의 한계와 한계 극복 노력
  - 한계: 재산과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이나 차등 부여
  - 한계 극복 노력: (라)
  - :

- <보기> —
- ㄱ. (가) - 입헌 군주제 폐지, 의회 정치 기반 마련
  - ㄴ. (나) - 영국으로부터 독립, 대통령제 정부 형태 수립
  - ㄷ. (다) - 인권 선언 채택, 자유와 평등의 이념 확산
  - ㄹ. (라) -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차티스트 운동 전개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민주 선거의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공직 선거법에서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것은 (가) 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헌법 재판소는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나) 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①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확일적 제한은 (가)에 위배된다.
- ②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가)에 위배된다.
- ③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은 (나)에 위배된다.
- ④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⑤ 한 선거구에 3년 미만 거주한 자에게 2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3표를 부여하는 것은 (나)에 위배된다.

4.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과거에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규범이 제정되고 집행되면 법치주의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 정치를 옹호하는 논리로 오용되면서 (가) 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나) 가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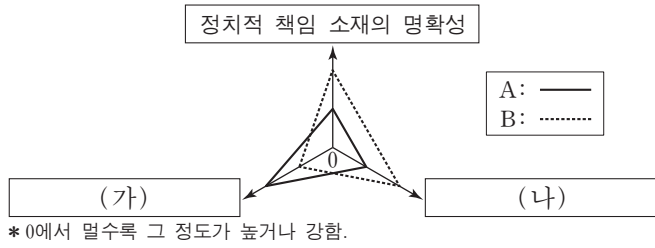
- ① (가)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한다.
- ⑤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5.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운전 중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 교통법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우선 이 규정이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은 교통사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안전띠를 매는 것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이 없으며, 운전자의 답답함이나 경미한 범칙금에 비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보아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도출 근거가 되는 기본권은 포괄적 권리이다.
- ② 헌법 재판소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을 근거로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였다.
- ③ 과잉 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그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 ④ 갑이 청구한 심판은 도로 교통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필요로 한다.
- ⑤ 헌법 재판소가 과잉 금지 원칙의 세부 원리를 차례로 판단한 이유는 이를 모두 위반해야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그림은 정당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임.)



<보기>

ㄱ. A는 B에 비해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ㄴ. B는 A에 비해 이념적 정체성이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여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다.  
 ㄷ.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연립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은 B보다 A에서 높게 나타난다.  
 ㄹ. (가)에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나)에는 '소수 의견 반영 가능성'이 적절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한 근본 규범으로 ㉠ 최고 규범성을 가진다. 따라서 ㉡ 민주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가]은/는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중략>... 한편, [나]은/는 인류 공존을 위하여 국가가 평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① ㉠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②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의 목적에 해당한다.  
 ③ (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본권의 유형은 절차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  
 ④ (가)를 통해 우리 헌법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를 실현하기 위한 사례로 행정부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8. 우리나라 국가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는 C의 장(長)과 D의 장(長)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② B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하여 A를 견제할 수 있다.  
 ③ C는 D의 장(長)과 E의 장(長)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④ D의 장(長)은 A와 달리 B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⑤ E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D에 재항고할 수 있다.

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동등한 힘이 없는 곳에 국가 간의 정의는 없다.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약소국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을: 총이 있는 자는 총으로 꿈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지만 총이 없는 자는 꿈과 불안하게 동거하거나 꿈을 회피한다.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총 없는 약자가 추구하는 정의 추구 방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병: 공동의 목초지에 풀이 부족해지자 농부들은 방목된 양의 수를 줄이자고 논의했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목초지는 황무지가 되었다. 지구라는 공유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세계 시민 의식과 지구 공동체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

<보기>

ㄱ. 갑과 을은 국제 사회에 무정부성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ㄴ. 을과 병은 국제 사회에 보편적 선이나 규범 그리고 이성 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ㄷ. 갑은 국가를 힘의 우위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지만, 병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상호 협력을 중시할 것이다.  
 ㄹ. 갑과 달리 을, 병은 국제 사회에서 국익에 따른 국가 간 동맹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현재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된 갑국 의회의 총 의석수는 6석이다. 갑국은 <방안 1>, <방안 2> 중 하나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

<방안 1> 선거구를 통합하여 현재 6개에서 3개로 줄이고, 의석수도 현재 6석에서 3석으로 줄이는 방안  
 <방안 2> 현재 의석수는 유지하되 각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전체 의석수를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안

\* 선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시 아래 표만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 <방안 1>의 경우, 현재와 같이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명의 후보자를 공천함.  
 \*\*\* <방안 2>의 경우, 각 정당 득표율에 총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数) 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함.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 결과> (단위: 명)

정당 \ 선거구	가	나	다	라	마	바	합계
A	700	400	900	800	600	600	4,000
B	500	500	600	500	700	300	3,100
C	300	900	200	400	300	800	2,900
합계	1,500	1,800	1,700	1,700	1,600	1,700	10,000

- ① 현재 갑국의 선거구 제도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최근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나' 선거구이고, 가장 작은 곳은 '가' 선거구이다.  
 ③ 최근 선거 결과, A당은 과대 대표되었고 C당은 과소 대표 되었다.  
 ④ <방안 1>을 적용하여 가-나, 다-라, 마-바로 선거구를 통합한다면, 선거구 획정에 A, B당은 찬성, C당은 반대할 것이다.  
 ⑤ <방안 2>를 적용하면 A, B, C당의 의석수는 동석이 된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6세)은 전자 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을과 200만 원인 최신형 컴퓨터를 1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날 저녁 갑의 컴퓨터 구매 사실을 알게 된 갑의 부모(법정 대리인)는 갑에게 선물할 태블릿 PC를 이틀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주문한 상태라고 하며 갑에게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의 취소를 권유하고 있다. 을은 계약 체결 이후 본사에 컴퓨터를 주문하였고, 이미 판매점에 컴퓨터가 도착한 상태이다.

- ① 갑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갑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이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갑은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갑이 최신형 컴퓨터를 갖기로 한 경우, 갑은 태블릿 PC를 주문한 인터넷 쇼핑몰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다. 갑은 손님이 많아지자 부모(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을(18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을은 헤어드라이어로 손님 병의 머리를 말리던 중 실수로 병의 두피에 화상을 입혔다.

- ① 을이 병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힌 것은 아니므로 병이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 ② 을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을의 부모는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직접적 가해자인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⑤ 갑과 미성년자인 을의 계약은 민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 갑은 타인의 지갑 속에 든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을은 타인이 사는 집에 방화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 병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살해하였다.

- ① (가)의 경우 법원은 범죄 피해가 경미함을 이유로 갑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고할 수 있다.
- ② (가)의 경우 갑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갑에 대하여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기간 동안 을에게 노역을 부과할 수 없다.
- ④ (나)의 경우 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다)의 경우 병은 무죄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 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남)과 을(여)이 혼인하여 A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이혼하여 을이 혼자 A를 양육하고 있었다. 한편, 병(남)과 정(여)이 혼인하여 B를 출산하였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병이 B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그 후 을은 A를 데리고 병과 재혼하였다. 재혼 후 3년이 지나 을과 병이 함께 여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병이 사망하였고, 을은 중상을 입었다. 병의 사망 후 “모든 재산을 을에게 물려준다.”는 병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사망 당시 병의 전 재산은 35억 원이며, 을의 재산은 없다.  
\*위 사례의 혼인은 모두 법률혼이며, 병의 사망 당시 A와 B는 미성년자임.

- ① 병과 정이 이혼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정은 B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병의 사망으로 인해 을이 B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된다.
- ③ 유언장의 효력이 있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을은 최대 2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④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병이 사망한 후 을도 사망한 경우, A와 B의 상속 금액은 동일하다.
- ⑤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만약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했다면 B의 법정 상속분은 10억 원이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연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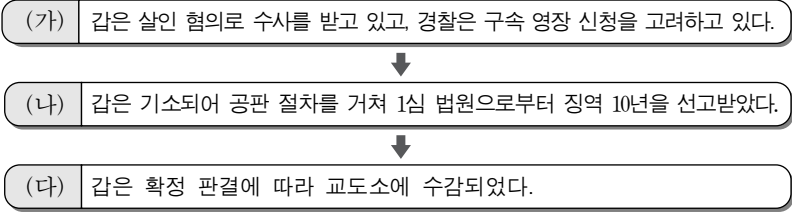
- 연구 주제: 배우자 간 선호하는 정부 형태 비교
- 조사 대상: 부부 100쌍(남성 100명, 여성 100명)
- 조사 방법: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함.  
(단, A, B는 각각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중 하나이며, 복수 응답 및 무응답은 없음.)
- 조사 결과
  - 남성은 A를 B보다 1.5배 선택하고, 여성은 B를 A보다 1.5배 선택함.
  - 이 가운데 부부가 함께 A를 선택한 경우는 30쌍임.
- 결과 분석: A를 선택한 사람은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A를 선호한 것으로 판단됨.  
...(후략)...

—<보기>—

ㄱ.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를 부부가 함께 선택한 경우는 30쌍이다.  
ㄴ.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 형태를 선택한 여성 중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정부 형태를 선택한 수는 배우자와 다른 정부 형태를 선택한 수보다 많다.  
ㄷ. 내각이 의회에 연대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를 선택한 여성 중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정부 형태를 선택한 수는 배우자와 다른 정부 형태를 선택한 수보다 많다.  
ㄹ.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한 정부 형태를 선택한 남성의 수보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선택한 여성의 수가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형사 절차 (가)~(다)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단계에서 경찰이 갑을 구속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가) 단계에서 갑이 구속되었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③ (가) 단계와 달리 (나) 단계는 수사 절차가 아니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나) 단계에서 갑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더라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 ⑤ (다) 단계에서 수형자 갑의 인권 보호를 위해 판사의 지휘로 형을 집행한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학생 갑(17세)과 중학생 을(13세), 초등학생 병(9세)은 상습적으로 근처 학교에서 자전거를 훔쳤다. 그러던 어느 날, 셋은 함께 정(17세)의 자전거를 훔쳐서 10m 정도 끌고 가던 중 들켜고 말았다. 정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갑을 뒤쫓아 체포한 후 경찰에 인계하였다. 한편 경찰은 을과 병을 뒤쫓아 검거하였다.

- ① 갑은 학생이므로 형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②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
- ③ 병은 앞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④ 정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 ⑤ 갑, 을, 병이 함께 정의 자전거를 훔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1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국제 연합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 '국제 연합 부패 방지 협약'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협약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결·공포되어 2008년에 발효되었다. 국회는 이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보기> —

ㄱ. ㉠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ㄴ.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ㄷ.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ㄹ. ㉢은 ㉣과 달리 헌법과 동일한 국내법적 지위를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1조 갑은 을에게 ○○시 ○○구 ○○로 123 ○○아파트 ○○동 ○○호를 2년의 기간(2014. 10. 1.~2016. 9. 30.)으로 임대한다.

제2조 ① 보증금은 300만 원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

- ①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을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연체된 임대료 등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을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후에도 을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 다음 자료는 부당 해고를 당한 갑(19세)이 작성한 체크리스트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I 근로 계약 관련**

1.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나요?                      예   아니요

2. 근로 계약서에 근로 시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었나요?   예   아니요

3. 실제 근로 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였나요?   예   아니요

4. 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 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았나요?   예   아니요

5.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나요?   예   아니요

6. 이 외에 근로 계약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예   아니요

**II 부당 해고 관련**

1. 근로 3권을 침해당하였나요?                                      예   아니요

- ① 갑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하여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은 근로 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위반된다.
- ③ 국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인해 갑이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다.
- ④ 갑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에 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